

정당의 정치적 동원과 투표참여: 19대 총선을 중심으로

김 영 태 | 목포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정당(후보자)이 선거과정에서 누구를 접촉하는지, 그리고 정당의 유권자 접촉이 투표참여에 영향을 주는지 19대 총선을 사례로 경험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선거과정에서 한국 정당의 유권자 접촉 범위는 17~18대 총선에 비해 19대 총선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당(후보자)과 유권자의 연계(linkage)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19대 총선과정에서 한국 정당이 접촉한 유권자는 사회경제적 지위나 정당충성도 등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정치참여 활동이 활발할수록 정당과 접촉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한국 정당의 유권자 접촉은 정당간의 차이가 거의 없으며, 무차별적이고, 임의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 특히 이러한 무차별적 유권자 접촉은 정당지지에서 안정성을 보이는 새누리당보다 불안정성을 보이는 민주당에서 강해, 정당 간에 다소 차이를 보였다. 셋째,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투표참여에 영향을 주는 다른 여러 요인들을 통제한 가운데 정당의 정치적 동원, 즉 선거과정에서의 유권자 접촉여부와 접촉방식의 다양성 모두 투표참여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한국의 선거 과정이 정치적 활동이 활발한 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주제어: 정치적 동원, 정당접촉, 선거운동, 투표참여, 선거

I. 서론

누가 투표에 참여하는가의 문제는 선거연구의 오래된 연구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사회경제적 지위에 기초해 투표참여를 분석하거나 기대효용의 관점에서 투표참여의 문제를 분석한 합리적 선택이론이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예컨대 투표를 위한 정보비용의 부담이 적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고연령, 고학력, 고소득 유권자는 투표의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 적기 때문에 투표참여가 용이하다고 보며, 실제 다수의 경험적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김옥 1998; 박찬욱 1992; Wolfinger and Rosenstone 1980). 또한 기대효용의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투표참여 문제를 설명하고자 하는 합리적 선택이론을 둘러싼 이론적 논의나 경험분석의 결과 역시 매우 풍부하다(김재한 1993; 김옥 1998; 2002; 조성대 2006; Downs 1957; Fiorina 1990).

그러나 이들 논의에서는 투표참여의 문제가 유권자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선거의 주요 행위자 가운데 하나인 정당(후보자)의 노력이 간과되어 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당의 정치적 동원이 유권자의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서 정치적 동원이란 선거운동과정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를 선거에 참여시키기 위해 혹은 유동적인 유권자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직접대면, 우편, 전화, 문자, 메일, SNS 등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유권자를 접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¹⁾ 이러한 정당의 유권자 접촉을 통한 정치적 동원은 투표참여에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Fiorina 1990; Gerber and Green 2000; Katz and Elersveld 1961; Kramer 1970; Merriam and Gosnell 1924; Rosenstone and Hansen 1993).²⁾ 비록 특정 정당에 한정되지만 실제 한국의 경우에도 최근 선거과정에서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운동이 일상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의 경우 — ‘준봉투표’의 경험이 있어 정치적 동원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 정당의 정치적 동원이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정당의 정치적 동원, 즉 선거과정에서 유권자 접촉이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19대 총선을 사례로 경험분석해 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정당의 정치적 동원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 가운데 다른 무엇보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에 주목한다. 첫째, 정당은 정치적 동원을 위해 누구와 접촉하는가? 둘째, 정당의 정치적 동원은 투표참여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먼저 후자의 논점인 정당의 정치적 동원과 투표참여의 관계 문제는 개인적 차원의 투표참여 결정요인이라는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 1) 정당(후보자)의 유권자 동원은 넓은 의미에서 정당과 후보자가 직접적으로 유권자를 접촉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조직 등을 통한 간접적 방식의 접촉도 포괄한다(Rosenstone and Hansen 1993).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정당(후보자)의 유권자 동원은 정당의 접촉만을 의미하는 제한적 의미로 사용한다.
- 2) 선거과정에서 정당과 후보자의 동원을 구분할 수도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이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후보자의 동원을 포괄하는 의미로 정당의 정치적 동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겠다.

투표율 감소경향과 관련해서도 커다란 관심을 끌고 있다. 즉 투표참여에 관한 전통적 이론인 사회경제적 지위이론이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른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투표율이 감소경향을 보이는 현실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이면서, 투표율의 감소경향을 정당의 해체(dealignment)와 이로 인한 정당의 유권자 동원 약화로 설명하려는 시도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Goldstein and Ridour 2002; Rosenstone and Hansen 1993; Ryu 2011; Vowles 2000). 물론 투표율 감소경향과 정치적 동원의 관계뿐만 아니라 어떤 정치적 동원방식이 투표참여에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혹은 비교 국가적 관점에서 어떤 제도적·정치적 환경에서 정치적 동원이 투표참여에 영향을 주는지 등도 기존 연구의 주요 관심사이기도 하다(Cox 1999; Mainwaring 1998). 본 연구 역시 기존 연구와 동일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정당정치가 제도화되지 못하고 단순다수제를 중심으로 하는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적 사례를 통해 정치적 동원과 개인적 차원의 투표참여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기존 비교 국가적 연구나 서구 국가를 대상으로 한 사례 연구 결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다만 경험분석 자료의 제한으로 본 연구의 경험분석은 19대 총선에서 정당의 정치적 동원, 즉 유권자 접촉이 투표참여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제한한다.

다음으로 선거과정에서 정당이 정치적 동원을 위해 누구와 접촉하는가라는 전자의 문제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연구문제이다. 선거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정당이 제한된 자원으로 유권자와 접촉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예컨대 제한된 자원으로 동원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동원 효과가 큰 기존 지지층 등을 동원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지지층이 견고하고 투표참여가 확실한 경우나 유동층이 많은 경우 오히려 유동층 등을 동원하는 전환전략(conversion strategy)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Rosenstone and Hansen 1993; Hillygus and Shields 2009). 따라서 한국의 주요 정당이 누구와 접촉하는가라는 정당의 유권자 동원전략에 대한 분석은 한국사회의 정당과 유권자의 연계(linkage), 그리고 개별 정당의 속성을 파악하는 데 커다란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여기에 투표율 감소와 함께 특정 정치적 소외 계층이 투표참여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는 주장을 감안할 때 한국 정당의 정치적 동원이 특정 유권자 층에 집중되고 있는지도 매우 흥미로운 관심거리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본 연구의 첫 번째 부분(II)에서는 정당의 정치적 동원과 투표참여 관계를 중심으로 정치동원과 관련한 기존의 논의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두 번째 부분(III)에서 19대 총선을 사례로 경험분석결과를 소개한다.

여기에서는 19대 총선과정에서 정당이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많은 유권자와 접촉했는지 간략히 살펴본 후, 정당이 누구와 접촉했는지, 그리고 정당의 유권자 접촉이 투표참여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소개할 것이다. 또한 마지막 부분(IV)에서는 본 연구의 경험분석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서 그 시사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II. 이론적 논의

투표참여에 대한 정치적 동원의 효과는 고전적인 투표행태 연구에서 이미 주목을 받은 바 있다(Gosnell 1927; Katz and Lazarsfeld 1953; Lazarsfeld et al. 1948; Merriam and Gosnell 1924).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동원효과는 상당기간 동안 투표참여연구에서 소홀히 취급되다가 최근 다시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다. 이처럼 정치적 동원효과가 다시 주목을 받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투표참여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으로 간주되어온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요인으로는 지속되는 투표율 감소 경향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여기에 사회경제적 지위이론이나 합리적 선택이론과 같은 기존의 주요 투표참여이론에서는 유권자의 사회적 특성이나 유권자 스스로의 이해득실에 대한 판단에 따라 투표참여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서 정당의 정치적 동원과 같은 유권자 측면 이외의 중요한 영향요인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도 정치적 동원효과에 주목하게 만들고 있다.

실제 많은 경우 유권자 스스로가 비용과 효용을 고려하여 투표에 참여하겠지만, 정당의 유권자 접촉을 통한 동원 역시 유권자의 투표참여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정당은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한 석이라도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하려고 하며, 이를 위해 정당은 선거과정에서 유권자를 동원할 수 있도록 제한된 자원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한다. 이러한 정당의 정치적 동원을 위한 노력은 유권자에 대한 선거정보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투표를 위한 비용의 감소를 의미하거나 혹은 유권자에 대한 사회·정치적 압력의 의미를 가져 정당의 정치적 동원이 없었다면 투표장에 나가지 않았을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과거 미국의 투표참여 독려(Get-Out-the-Vote)나 최근 한국 선거에서 야당의 투표참여운동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정당의 정치적 동원을 위한 유권자 접촉이 이미 투표의사가 결정된 유권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치적 동원의 투표참여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경험연구결과도 없지 않다(Goldstein and Ridout 2002; Rosenstone and Hansen 1993). 그럼에도 정당의 정

치적 동원이 투표참여에 긍정적 효과를 준다는 경험연구나 실험연구 결과가 적지 않다. 예컨대 로젠스톤과 한센(Rosenstone and Hansen 1993)은 미국의 경험분석에 기초해 1960년대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정치적 동원이 이루어졌을 경우 1980년대 투표율 하락이 11.3%가 아닌 2.6%에 그쳤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며, 커넬과 재콥슨(Kernell and Jacobson 2000)도 정당과 노동조합과 같은 사회조직의 정치적 동원 약화가 미국의 투표율 하락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고 밝히고 있다.³⁾ 심지어 덴버와 핸드스(Denver and Hands 1974)는 경쟁이 치열한 중요 선거구의 투표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유권자들의 합리적 계산 때문이 아니라 정당이 유권자들의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킨 결과라고 본다.

투표참여에 대한 정당의 정치적 동원효과는 정당이 어떤 방식으로 유권자를 접촉하는냐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예컨대 한 실험연구(Gerber and Green 2000)는 이웃이나 친구, 동료 등의 직접적 대면을 통한 동원이 전화와 같은 간접적 동원 방식보다 투표참여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당의 정치적 동원을 위한 유권자 접촉방식의 변화가 투표율의 지속적 하락에 영향을 주었다는 경험분석결과(Reed 2007)는 매우 흥미롭다.⁴⁾ 이에 따르면 과거 유권자 접촉방식의 대표적 형태인 노동집약적(labor-intensive)인 직접대면접촉(door-to-door contact)이 사회적 변화와 함께 자본집약적(money-intensive)인 비개인적 접촉(impersonal contact) 형태로 바뀌면서 정치적 동원효과가 약화되고, 이에 따라 투표율의 감소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자본집약적인 비개인적 접촉이 노동집약적인 직접대면접촉보다 효율적(efficient)이겠지만 효과적(effective)이지는 못하다는 것이다.

비록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이 정치적 동원의 정기적 투표율에 대한 영향이나 동원방식에 따른 동원 효과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한국적 현실에 함의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한국의 경우 직접대면접촉이 제도적으로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허용되고 있는데다, 대면접촉의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정당의 당원이나 자원봉사자가 대단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한국은 소선거구 1위대표제 중심의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선거구 1위대표제에 비해 비례제가 투표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

3) 이와 달리 일부 연구(Goldstein and Ridout 2002; Aldrich and Rohde 2002)에서는 미국에서 정치적 동원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던 1960년대에 투표율은 오히려 높았다면서 정치적 동원과 투표율 하락은 무관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4) 이와 달리 유권자 접촉방식의 변화가 투표율 하락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경험분석결과도 있다. 예컨대 Goldstein and Ridout(2002)를 참고하라.

져 있는데, 일부 연구결과는 비례제의 높은 투표율이 정당의 정치적 동원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Karp 2003; Powell 1980; Vowles 2002). 즉 비례제의 경우 유권자의 정치적 효능감이 높고, 유권자의 한 표 한 표가 의석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정치적 동원에 유권자들이 보다 쉽게 반응할 수 있고, 이처럼 동원효과가 쉽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의석 1석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정당의 동원노력도 그만큼 더욱 커져 동원효과가 최대화될 수 있다. 이처럼 미국이나 영국,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등과 같은 서구 선진 국가에서도 정치적 동원의 투표참여 효과가 다소 논쟁적인 가운데 투표참여 효과가 가장 큰 직접대면접촉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선거제도 역시 소선거구 1위대표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한국에서 정당의 정치적 동원이 투표참여에 영향을 줄 것인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으며, 바로 이 점에서 한국 사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한국과 같은 조건에서 정당의 정치적 동원이 투표참여에 영향을 준다면 한국보다 긍정적인 조건을 갖춘 다른 국가들의 경우 정당의 정치적 동원이 투표참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선거과정에서 정당의 정치적 동원은 모든 유권자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행해지는 것은 아니다. 정당이 정치적 동원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정치적 동원을 위해서는 자금이 요구되지만 선거자금이 무한정이지 않을 뿐더러 한국의 예와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제도적으로 선거자금의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정치적 동원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당원이나 자원봉사자 등과 같은 정당 조직 차원의 조직력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정당은 가용 선거자금의 범위 안에서 정치적 동원이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 정당은 유권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무튼 정당은 정치적 동원을 위한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정치적 동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동원전략에 따라 선거과정에서 유권자를 접촉하려 할 것이다.

기존 연구 결과(Hillygus and Shields 2009; Rosenstone and Hansen 1993)에 따르면 정당은 이전 선거에 참여했던 경험을 가진 유권자나 혹은 노동조합과 같은 사회조직에 소속된 유권자와 같은 소위 설득 가능한 유권자(persuadable voters)의 경우 투표참여 가능성이 높아 정당의 정치적 동원이 보다 쉽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당은 작은 비용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들을 접촉하려 한다. 물론 설득 가능한 유권자가 이들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유권자들 가운데 통상 투표참여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선거운동 이전부터 잠재적 지지정당을 가지고 있는 정당일체감(party identification)을 지닌 소위 정당충성층(party loyalties) 역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유권자에 속하며, 따라서 정당은 적극적으로 이

들과 접촉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 정당은 정당충성층보다 정당충성도는 약하지만 정치적 접촉을 통해 투표에 참여해 자신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유권자를 접촉하는 소위 전환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다. 다만 정당이 이처럼 전환전략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설득 가능한 유권자를 접촉하는 일반적인 동원전략을 사용하느냐는 여러 가지 조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신생 민주주의 국가와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 사이의 정치적 동원양상을 비교한 연구결과(Karp and Banducci 2007)는 매우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에 따르면 서구 민주주의 국가는 안정적이고 강력한 정당일체감, 낮은 수준의 투표유동성, 정당에 대한 신뢰, 정당의 안정적 자원 등에 기초해 정당정치가 제도화되어 있는 반면 신생 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정당정치의 제도화 수준이 일천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은 유권자를 동원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신생 민주주의 국가와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 사이의 정당제도화의 차이는 정당의 정치적 동원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전환전략이 신생국에서 보다 빈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화의 역사가 대략 25년 정도이고, 정당의 제도화는 대단히 취약한 수준인 한국의 경우 어떤 유권자 동원전략을 사용하는지, 주요 정당 간 차별성이 존재하는지 등을 분석해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연구주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정당이 선거과정에서 정치적 동원을 위해 누구와 접촉하느냐는 단지 정당의 선거 전략이라는 측면에서만 관심을 끄는 것은 아니다. 최근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불평등의 관계가 많은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정치참여의 불평등, 특히 투표참여의 불평등 문제 역시 관련 연구가 활발하기 때문이다(Blais 2000; Goodin and Dryzek 1980; Meltzer and Richard 1981; Norris 2002). 이들 논의 가운데 본 연구와 관련하여 흥미를 끄는 것은 선거과정에서 정당의 정치적 동원이 대부분 정치참여에 적극적인 설득 가능한 유권자에 집중됨으로써 선거과정에서 특정 계층의 지속적 배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Huckfeldt and Sprague 1992; Rosenstone and Hansen 1993; Wielhouwer 2005). 즉 유권자 개인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정당 차원에서 집단적인 정치적 배제가 재생산될 수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한국 정당이 선거과정에서 누구와 접촉하는가에 대한 분석은 한국 정당정치와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다.

III. 경험분석결과

1. 정당의 정치적 동원: 접촉 규모와 접촉 방식

본 연구의 주된 초점인 정당이 누구를 접촉하는지와 정당접촉과 투표참여의 관계를 분석하기 전에 먼저 한국 정당이 선거과정에서 정치적 동원을 위해 접촉하는 유권자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들을 주로 어떤 방식으로 접촉하는지 한국선거학회가 17대, 18대 그리고 19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실시한 총선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자.⁵⁾

〈표 1〉에 제시된 분석결과에 따르면 2004년 17대 총선 과정에서 정당과 접촉했다는 유권자는 전체 응답자 1480명(모름/무응답 제외, 이하 동일) 가운데 16.9%에 해당하는 25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18대 총선과정에서 역시 정당과 접촉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 975명 가운데 171명인 17.3%로 17대 총선 당시와 거의 유사한 수준을 보인다. 이와 달리 19대 총선에서 정당과 접촉했다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 987명 가운데 393명으로 무려 39.8%에 달한다.

이처럼 17·18대 총선과 달리 19대 총선에서 갑작스럽게 정당과 접촉했다는 응답자가 크게 증가한 원인을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17·18대와 19대 총선조사의 설문 문항이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과 함께 19대 총선과정에서부터 크게 확산된 모바일을 통한 선거운동과 같은 선거운동방식의 변화도 여기에 일정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보다 구체적으로 17대와 18대의 경우 “이번 선거운동 기간 중 특정 후보나 정당 관계자가 ○○님에게 특정후보나 정당을 찍어달라고 설득한 적이 있나요?”라고 묻고 있는 반면 19대의 경우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직접 또는 기타 다른 방식을 통해 ○○님께 접촉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설문 문항을 사용하고 있다. 즉 17대와 18대의 경우 의미상 직접성과 설득이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19대의 경우 직접 이외 방식을 언급함과 동시에 설득 보다 약한 접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응답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뒤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19대 총선 조사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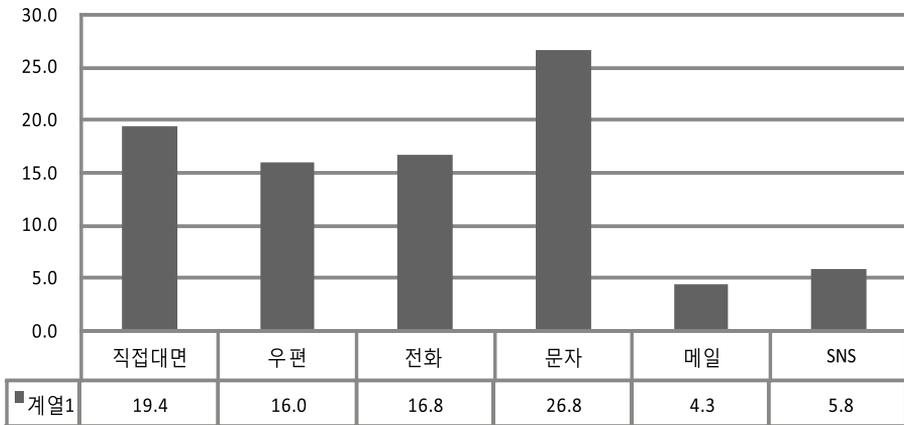
5) 한국선거학회 17대·18대(한국사회과학데이터 2004; 2008) 국회의원선거조사 자료는 한국사회과학데이터(KSDC) DB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 활용한 19대 국회의원선거조사 자료 역시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현재까지 비공개이지만 추후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DB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표 1〉 17~19대 총선 정당(후보자)의 유권자 접촉

	17대(2004년)	18대(2009년)	19대(2012년)
접촉경험 있음	250 (16.9%)	171(17.3%)	393(39.8%)
N*	1480	975	987

* 모름/무응답 제외

출처: 한국선거학회 17·18·19대 국회의원선거조사(한국사회과학데이터 2004; 2008;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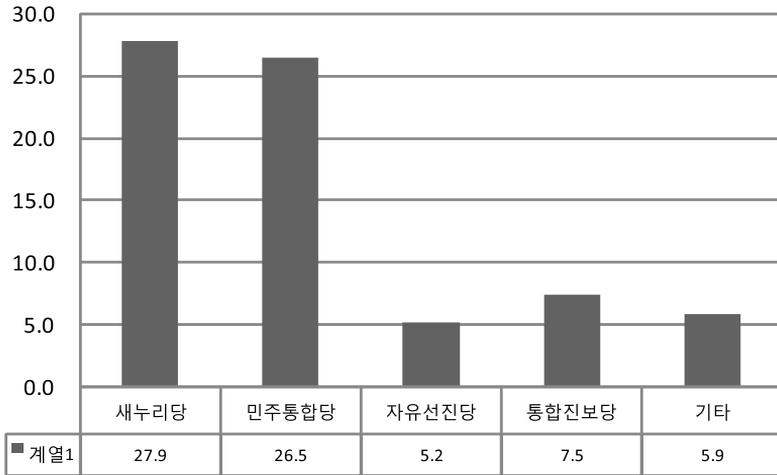


출처: 한국선거학회 19대 국회의원선거조사(한국사회과학데이터 2012)

〈그림 1〉 19대 총선 접촉방식별 정당(후보자)의 유권자 접촉률(%) (접촉방식별 N=1,000)

직접대면접촉을 했다는 응답자는 19.4%에 불과한 반면, 다른 방식, 예컨대 문자를 통해 접촉했다는 응답자는 26.8%에 달하고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해준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17·18대 조사에서는 구체적인 접촉방식에 대한 설문문항이 없어 이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다음으로 〈그림 1〉을 중심으로 한국 정당들이 19대 총선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유권자를 접촉했는지 살펴보자. 〈그림 1〉에 따르면 직접대면, 우편, 전화, 문자, 메일, SNS 등의 방식 가운데 정당이 문자를 통해 접촉했다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 가운데 26.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문자가 가장 일반적인 정당의 유권자 접촉 방식임을 알 수 있다. 정당이 직접대면을 통해 접촉했다는 응답자는 19.4%로 문자 다음의 비중을 보이고 있는데, 가가호호 방문이 제도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래도 꽤 높은 수



출처: 한국선거학회 19대 국회의원선거조사(한국사회과학데이터 2012)

〈그림 2〉 19대 총선 정당별 유권자 접촉(% , N = 1,000)

준이라고 할 수 있다.⁶⁾ 또한 우편을 통한 접촉과 전화를 통한 접촉 비율은 각각 16.0%와 16.8%로 전체적인 접촉비율에 근접한 수준이다. 이와 달리 메일과 SNS를 통해 정당이 접촉했다는 응답자는 각각 4.3%와 5.8%로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견 한국 사회의 급격한 정보화가 선거운동의 급진적 변화를 가져왔을 것이라 추측할 수도 있지만, 이는 문자와 같은 대중화된 방식에 해당될 뿐 메일과 SNS 등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정당별로 유권자 접촉규모를 살펴보면 새누리당과 접촉했던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27.9%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민주통합당과 접촉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도 26.5%로 거의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그림 2 참고). 자유선진당과 통합진보당과 접촉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각각 5.2%와 7.5%로 새누리당이나 민주당과 같은 거대 정당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선거과정에서 정당의 유권자 접촉이 정치자금이나 조직력 등과 같은 정당의 자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

6) 여기에서는 상세히 살펴보지 않겠지만 제시된 여섯 가지 방식 모두를 통해 정당이 접촉했다는 응답자는 0.6%, 다섯 가지 방식은 1.2%, 네 가지 방식 3.1%, 세 가지 방식 7.9%, 두 가지 방식 12.4%, 한 가지 방식 10.5% 등으로 접촉방식에 따라 대상자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19대 총선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유권자 접촉

			민주통합당		Total
			접촉 없음	접촉	
새누리당	접촉없음	Count	658	63	721
		% of Total	65.8	6.3	72.1
	접촉	Count	77	202	279
		% of Total	7.7	20.2	27.9
Total		Count	735	265	1,000
		% of Total	73.5	26.5	100.0

출처: 한국선거학회 19대 국회의원선거조사(한국사회과학데이터 2012)

할 수 있다.

그렇다면 19대 총선과정에서 각 정당들이 접촉한 유권자들은 정당별로 중첩될까 혹은 상이할까? 양대 정당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과 접촉한 유권자를 중심으로 이를 살펴보자. 〈표 2〉에 제시된 분석결과에 따르면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과 접촉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모두 342명(무응답 포함 전체 응답자 100명 가운데 34.2%)이며, 이 가운데 새누리당만을 접촉한 응답자는 77명(7.7%), 민주통합당만을 접촉한 응답자는 63명(6.3%)이다. 반면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와 접촉했다는 응답자는 202명(20.2%)으로, 양당과 접촉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342명 가운데 59.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국 이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선거과정에서 접촉한 유권자들이 상당 정도 상호 중첩되고 있다는 것으로, 한국 정당의 유권자 접촉이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정당에 따라 접촉방식이 상이성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접촉방식별로 정당접촉여부를 분석한 결과 새누리당과 직접대면접촉을 경험한 응답자는 151명, 민주당과 직접대면 응답자는 138명이었으며, 문자의 경우 새누리당 194명, 민주당 191명, 우편접촉의 경우 새누리당 127명, 민주당 118명, 전화의 경우 새누리당 124명, 민주당 122명, 이메일의 경우 새누리당 30명, 민주당 36명, 그리고 SNS의 경우 새누리당 44명, 민주당 43명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 유권자를 접촉하는 방식은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2. 정당의 유권자 동원: 누구를 접촉하는가?

앞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선거과정에서 접촉한 유권자들이 상당 정도 상호 중첩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 정당이 선거과정에서 누구를 접촉하는지를 한국선거학회의 19대 총선조사 자료에서 나타난 정당접촉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본 연구의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위한 종속변수로는 모든 정당의 접촉여부를 더미(dummy) 변수화하였으며, 별도로 새누리당 접촉여부와 민주당 접촉여부 역시 더미 변수화하였다(각 변수의 변수 값은 접촉=1, 비접촉=0으로 처리하였음). 모든 정당의 접촉 여부 뿐 아니라 새누리당과 민주당 접촉여부도 별도의 종속변수로 고려한 것은 이들 두 주요 정당의 접촉대상이 동일하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⁷⁾

다음으로 독립변수로는 먼저 성별(남성=1, 여성=2), 연령, 학력(중졸 이하=1, 고졸 이하=2, 대재 이상=3), 거주지 규모(농촌=1, 중소도시=2, 대도시교외=3, 대도시=4), 소득(0~199만원=1, 200~299만원=2, 300~399만원=3, 400~499만원=4, 500만원 이상=5) 등과 같은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고려하였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제한된 자원을 가진 정당은 동원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권자와 접촉하려 할 것이며,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유권자 개인의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동원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여성보다는 남성이, 저연령층보다는 고연령층이,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도시규모가 클수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으며, 따라서 정당은 이들을 접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독립변수로 고려된 또 다른 변수는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와 함께 앞서 언급한 기존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소위 설득 가능한 유권자를 판단할 수 있는 독립변수들로 정치지식, 정치적 효능감, 정치참여도, 사회조직참여도, 그리고 18대 총선투표 참여 등과 같은 정치적 자원과 관련된 것들이다. 앞서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변수들이 사회경제적 배경이라는 의미에서 정치적 동원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면 이들 변수의 경우 실제 정치참여와 선거참여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원효과가 매우 큰 변수들이라

7) 본 논문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소개하는 <표 3>과 함께 투표참여를 분석한 <표 4>의 분석사례수가 전체 응답자(N=1,000)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분석에 포함된 독립변수가 많아 무응답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고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각 변수들의 변수 값은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정치지식은 지역구 국회의원 이름, 기획재정부장관 이름, 실업률, 제1야당 등에 대한 인지여부에 따라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⁸⁾ 정치적 효능감은 “누가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누구에게 표를 던지느냐가 미래의 일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투표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내가 투표를 하는가 안하는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등의 세 가지 진술에 대한 공감과 동의 여부의 정도에 따라 값이 클수록 효능감이 높게 11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또한 정치참여도는 청원서 서명, 사회운동(불매운동 등) 참여,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시위 참여, 파업 참여, 빌딩·공장 등 점거, 정당·시민단체 가입 등과 같은 여섯 가지 정치참여 유형에 대한 참여 여부와 의지에 따라 18점 척도로 측정하였다.⁹⁾ 사회조직참여도는 농민단체, 노조, 재계, 전문단체 등의 참여여부에 따라 이들 단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참여한 응답자는 1, 그렇지 않은 응답자는 0의 값을 갖도록 하였다. 18대 총선 투표여부에 따라 기권/투표권 없음=0, 투표=1로 하였다.

독립변수로 고려된 마지막 변수들은 정당일체감과 거주 지역, 그리고 이념성향 등 세 가지다. 이는 한국 유권자들의 정당지지를 결정하는 요인들로 앞서 언급한 정당충성층을 구분하는 변수로, 정당이 순수동원전략을 사용하는지 혹은 전환전략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비정당충성층보다 정당충성층에 대한 접촉 가능성이 높다면 정당이 순수동원전략을, 그렇지 않다면 전환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당일체감은 여러 가지로 측정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민주당 일체감과 새누리당 일체감을 각각 구분하여 더미변수(일체감 없음=0, 일체감 있음=1)로 측정하였다.¹⁰⁾ 또한 거주 지역은 수도권과 강원을 기준으

8) 조사에는 UN 사무총장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도 포함되어 있다. 모름/무응답(70명)을 제외하면 단 1명만 오답을 말하고 나머지(929명)는 모두 정답을 말할 정도로 인지도가 높아 여기에서는 이 설문을 제외하고 측정하였다.

9) 정치참여도에 참여여부뿐만 아니라 참여의지를 포함시키는 것은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가치변화와 정치참여의 관계를 분석한 잉글하트(Inghardt)를 포함한 상당수의 기존 연구는 정치참여도를 측정할 때 참여여부뿐만 아니라 참여의지도 포함시키고 있으며, 본 연구 역시 이들 연구에 준하였다. 각각의 참여유형에 따라 불참=0, 참여의지 있음=1, 참여한 바 있음=2로 측정된 값을 합산하여 변수 값을 구성하였다. 한편 여섯 가지 정치참여유형을 단일 차원으로 합산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신뢰도분석 결과(Cronbach's Alpha=.841)단일 차원 구성에 문제가 없었으며, 요인분석 결과 역시 여섯 가지 참여유형이 단일차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0) 단일변수로 강도나 여부에 따라 일체감을 측정하거나, 각 정당에 대한 일체감의 강도를 고려하여 정당일체감을 측정할 수도 있겠지만, 본 논문에 결과가 다양한 측정 방식 모두 정당접촉여부에는 유의미한($p < .10$)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기에서는 두 정당에 대한 일체감

〈표 3〉 19대 총선 정당접촉여부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정당접촉 전체			새누리당 접촉			민주당 접촉		
	B	S.E.	Sig.	B	S.E.	Sig.	B	S.E.	Sig.
성별	-0.098	0.225	0.662	-0.194	0.234	0.407	-0.246	0.243	0.312
연령	0.017	0.011	0.130	0.007	0.012	0.584	0.018	0.012	0.138
학력	0.359	0.227	0.114	0.064	0.233	0.783	0.361	0.244	0.139
거주지규모	-0.143	0.100	0.153	-0.228**	0.103	0.027	-0.064	0.107	0.549
소득	0.002	0.090	0.978	-0.034	0.092	0.713	-0.103	0.097	0.287
정치지식	0.216**	0.111	0.050	0.181	0.115	0.117	0.140	0.121	0.246
정치효능감	0.050	0.052	0.339	0.072	0.055	0.189	0.061	0.058	0.291
정치참여도	0.151***	0.046	0.001	0.153***	0.048	0.001	0.135***	0.049	0.006
사회조직참여	-0.024	0.361	0.948	-0.029	0.370	0.938	-0.253	0.401	0.528
18대투표	0.398	0.266	0.135	0.441	0.285	0.122	0.093	0.294	0.752
민주일체감	0.164	0.288	0.570	0.074	0.301	0.807	0.449	0.310	0.147
새누리일체감	0.172	0.310	0.579	0.386	0.322	0.229	0.184	0.344	0.592
충청	-0.408	0.458	0.374	-0.566	0.488	0.246	-1.249*	0.662	0.059
호남	0.290	0.368	0.430	-0.470	0.403	0.243	0.212	0.385	0.583
대구경북	0.200	0.365	0.583	-0.261	0.374	0.485	-0.321	0.395	0.417
부울경	-0.710*	0.382	0.063	-0.432	0.388	0.266	-0.666	0.423	0.115
진보	-0.946***	0.327	0.004	-0.596*	0.338	0.078	-0.908**	0.358	0.011
중도	-0.449	0.308	0.145	-0.201	0.318	0.528	-0.430	0.333	0.197
Constant	-3.243**	1.262	0.010	-2.263*	1.302	0.082	-3.275**	1.357	0.016
	Nagelkerke R ² =0.187			Nagelkerke R ² =0.147			Nagelkerke R ² =0.141		

*** p<.01, ** p<.05, * p<.10, N=419

출처: 한국선거학회 19대 국회의원선거조사

로 충청, 호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거주 여부를 변수화하여 독립변수로 포함시켰으며, 이념성향 역시 보수를 기준으로 진보, 중도를 변수화하여 독립변수로 고려하였다.

〈표 3〉에 제시된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에 따르면 먼저 사회경제적 지위를 측정된 성별, 연령, 학력, 소득 등은 모두 전체적인 정당접촉여부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접촉여부와 민주당 접촉여부에도 유의미한(p<.10, 이하 동일)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변수 가운데 유일하게 거주지 규모만이 새누리당 접촉여부에 유의미한 영향

여부만을 포함하였다.

을 주었지만, 거주지 규모 역시 전체적인 정당접촉여부나 민주당 접촉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연령이나 학력의 경우 전체적인 정당접촉 모델에서 유의도가 유의미 수준($p < .10$)을 약간 상회하고 있으며, 18대 총선 투표여부와 같은 일부 변수를 제외한 분석에서는 회귀계수의 방향 변화 없이 유의미성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확고한 (robust)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한국 정당은 유권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무관하게 광범위한 유권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접촉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정치지식, 정치적 효능감, 정치참여도, 사회조직참여도, 그리고 18대 총선투표 참여 등과 같은 유권자 개개인의 정치적 자원과 관련된 변수들 가운데 정치지식과 정치참여도는 전체 정당접촉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는 반면 정치적 효능감이나 사회조직참여도, 그리고 18대 총선투표 여부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구분할 경우 정치참여도만이 정당접촉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정치참여도는 세 모델 모두에서 접촉여부에 영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면 관계상 <표 3>에는 소개하지 않았지만 분석에 포함된 독립변수 가운데 정치참여도의 왈드(Wald) 통계량이 가장 큰 값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 정당들의 선거과정에서 유권자 접촉은 다른 무엇보다 정치참여도에 따라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청원서 서명, 사회운동(불매운동 등) 참여,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시위 참여, 파업 참여, 빌딩·공장 등 점거, 정당·시민단체 가입 등 다양한 정치참여방식에 더 많이 참여할수록 정당과 접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반면 18대 총선투표 여부가 정당접촉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 또한 주목할 만하다. 정당이 누구를 접촉하는가에 대한 기존 외국연구 대부분에서 이전 선거 투표참여 여부가 정당접촉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정당충성충과 관련하여 독립변수로 고려된 정당일체감과 거주 지역, 그리고 이념성향 등의 변수 가운데 정당접촉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는 거주 지역 가운데 충청지역과 이념변수 가운데 진보 변수이다. 두 변수 모두 회귀계수의 값이 음의 값으로 나타나, 충청 지역 거주자가 수도권과 강원 거주자에 비해, 그리고 진보적 유권자가 보수적 유권자에 비해 정당과 접촉할 가능성이 낮다. 다만 여기에서 충청 지역 거주 여부는 새누리당 접촉 여부에 유의미에 차이를 가져오지 않지만, 진보적 유권자는 보수적 유권자에 비해 새누리당과 민주당 각각과 접촉할 가능성도 낮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처럼 충청 지역 유권자나 진보적 유권자층이 정당과 접촉할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이처럼 정당일체감이 정당접촉여부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진보층을 접촉할 확률이 낮다는 것은 한국 정당이 자신을 지지하는 충성층을 선거과정에서

접촉하는 전략을 사용하기보다 정당충성 여부와 무관한 동원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¹¹⁾

3. 정당의 유권자 접촉과 투표참여

앞서 정당이 선거과정에 접촉하는 유권자들이 누구인지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정당의 정치적 동원, 즉 정당의 접촉 여부가 투표참여에 영향을 주는지 정당접촉 여부를 독립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¹²⁾ 또한 참고로 <부록 2>에는 직접대면, 우편, 전화, 문자, 메일, SNS 등과 같은 다양한 접촉 방식 가운데 각 접촉방식에 따른 접촉 여부를 종합한 접촉방식의 다양성 정도(0~6점, 접촉 없음=0, 여섯 가지 방식 모두=6)를 독립변수로 활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해 두었다.

한편 투표참여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을 충분히 통제한 이후에도 선거과정에서 정당의 접촉이 투표참여 여부에 영향을 주어야 정당의 정치적 투표참여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투표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투표참여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 즉 자원모델(resources model), 심리적 연계모델(psychological engagement model), 합리적 선택모델(rational choice model) 등과 같은 다양한 모델¹³⁾에서 고려되고 있는 요인들과 함

-
- 11) 지면관계상 여기에서는 상세한 분석결과를 소개하지 못하지만 직접대면, 문자접촉, 우편접촉, 전화접촉 여부 등을 종속변수로 하여 각각의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이에 따르면 먼저 정치참여도는 모든 분석에서 접촉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당 접촉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 주었다. 다음으로 정치지식의 경우 직접대면, 문자접촉, 우편접촉 여부 등에는 영향을 주지만, 전화접촉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사회경제적 변수 가운데 연령의 경우 직접대면과 전화에만, 그리고 학력은 문자접촉 여부에만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호남지역 거주자와 부산·울산·경남 지역 거주자가 다른 지역 거주자에 비해 직접대면과 문자접촉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이념적으로는 진보층이 보수층에 비해 문자와 우편 접촉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접촉방식별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난 원인을 설명하기는 쉽지 않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
- 12) 한국선거학회 19대 총선조사 자료에서 투표에 참여했다는 응답은 실제 투표율보다 과장되어 있다. 이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투표참여에 대한 두 로지스틱 회귀분석(<표 4>와 <부록 2>)에서는 실제 19대 총선 투표율로 가중치를 주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 13) 이들 투표참여모델은 블레이즈(Balis 2007)의 분류를 참고하였다. 블레이즈는 여기에 동원모델

〈표 4〉 19대 총선 투표참여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B	S.E.	Wald	Sig.	Exp(B)
연령	0.019**	0.010	4.119	0.042	1.020
학력	0.064	0.206	0.095	0.758	1.066
소득5분위	0.128	0.081	2.486	0.115	1.137
거주지규모	0.003	0.088	0.001	0.971	1.003
사회조직참여	0.875**	0.388	5.077	0.024	2.398
선거관심도	-0.849***	0.141	36.362	0.000	0.428
정치효능감	0.149***	0.043	12.048	0.001	1.161
투표의무감	-1.127***	0.222	25.745	0.000	0.324
정당일체감	-0.369*	0.211	3.043	0.081	0.692
충청	-0.457	0.335	1.857	0.173	0.633
호남	-0.069	0.332	0.043	0.835	0.933
대구경북	0.346	0.381	0.824	0.364	1.413
부울경남	0.008	0.282	0.001	0.977	1.008
정당접촉여부	0.425**	0.215	3.926	0.048	1.530
Constant	1.335	1.150	1.348	0.246	3.800

-2 Log likelihood=628.7099, Cox & Snell R Square=0.323421, Nagelkerke R Square=0.435568

1) *** p<.01, ** p<.05, * p<.10, N=677

2) 실제 투표율로 가중치를 두고 분석한 결과임

출처: 한국선거학회 19대 국회의원선거조사(한국사회과학데이터 2012)

께 한국의 투표참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요인들을 추가하였다.¹⁴⁾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통제변수로 고려된 변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경제적 변수로는 연령, 학력(중졸 이하=1, 고졸 이하=2, 대재 이상=3), 거주지 규모(농촌=1, 중소도시=2, 대도시교외=3, 대도시=4), 소득(0~199만원=1, 200~299만원=2, 300~399만원=3, 400~499만원=4, 500만원 이상=5)을 고려하였다. 다음으로 사회경제적 변수 이외의 자원 모델이나 심리적 연계 모델, 그리고 합리적 선택모델에서 독립변수

(mobilization model)을 추가하고 있는데 동원모델이 바로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정당 접촉의 영향에 주목하는 모델이다.

14) 한국의 투표참여 요인에 대한 기존 연구는 매우 풍부하다. 예컨대 강원택(2008), 김욱(1998, 1999), 김재한(2011), 김진하(2008), 박찬욱(1992), 이갑윤(2008), 이남영(1993), 조성대(2006), 지병근(2012), 황아란(1997) 등이 있다.

로 활용되는 사회조직참여(농민단체, 노조, 재계, 전문단체 등의 참여여부, 참여=1, 비참여=0), 선거관심도(1~4, 값이 클수록 관심 없음), 정치적 효능감(11점 척도, 클수록 효능감이 큼), 투표의무감(0~1), 정당일체감(0~1) 등과 함께 수도권과 강원을 기준변수로 하고 충청, 호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을 더미 변수화한 거주 지역 변수를 통제변수로 추가하였다.

〈표 4〉에 제시된 투표참여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에 따르면 먼저 고려된 통제변수 가운데 19대 총선 투표참여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는 연령, 사회조직참여 여부, 선거관심도, 정치효능감, 투표의무감, 정당일체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농민단체, 노조, 재계, 전문단체 등의 사회조직 가운데 어느 하나에라도 가입한 응답자일수록, 선거관심도가 높을수록, 정치효능감이 클수록,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투표의무감을 가진 유권자가 그렇지 않은 유권자에 비해, 그리고 정당일체감이 있는 유권자가 그렇지 않은 유권자에 비해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높다. 이와 달리 학력이나 소득, 거주지 규모, 거주 지역 등은 19대 총선의 투표 참여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주된 관심을 갖는 정당의 접촉여부는 다른 투표참여 영향요인을 통제할 상태에서도 19대 총선 투표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당과 접촉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접촉경험이 없는 응답자에 비해 대략 1.5배($\exp(B)=1.530$) 정도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높다. 뿐만 아니라 〈부록 1〉에 제시된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당접촉방식의 다양도 역시 투표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정당접촉방식이 다양할수록 투표참여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선거과정에서 유권자 접촉을 통한 정당의 정치적 동원은 투표참여율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IV. 결론: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정당(후보자)이 선거과정에서 누구를 접촉하는지, 그리고 정당의 접촉이 유권자의 투표참여에 영향을 주는지 19대 총선을 사례로 경험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시사점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거과정에서 한국 정당의 유권자 접촉 범위는 17~18대 총선의 경우 17% 수준에

머물렀으나, 19대 총선에서는 40%로 크게 늘어났다. 이처럼 19대 총선에서 정당이 접촉한 유권자가 급격히 증대한 것은 설문문항의 차이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최근 선거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문자 등을 통한 개별적 접촉이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접촉방식에서 직접대면은 19% 수준이지만 문자를 통한 접촉은 27%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최근 등장하고 있는 뉴미디어가 정당의 유권자 접촉대상을 확대시켜 주고 있으며, 이는 정당(후보자)과 유권자의 연계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다만 문자의 경우 상당히 일방적이고 거의 스팸수준인 경우도 적지 않아 19대 총선에서 나타난 정당과 유권자의 접촉 증대가 정당(후보자)과 유권자의 연계가 질적 수준의 확대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겠다.

둘째, 분석결과 19대 총선과정에서 한국 정당이 접촉한 유권자는 사회경제적 지위나 정당충성도 등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다른 무엇보다 정치참여 활동이 활발할수록 정당과 접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정당접촉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전 선거의 투표참여 여부, 즉 18대 총선참여 역시 19대 총선의 정당접촉 여부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선거과정에서 접촉한 유권자들도 상당 정도 중첩되어 각 당이 접촉한 유권자의 특성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한국 정당이 선거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충성층을 동원하려는 노력을 크게 기울이지 않는 것 같다. 결국 이러한 결과는 정당정치가 제도화되지 못하고, 투표의 유동성이 큰 신생 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전환전략이 일반적이라는 기존 연구 결과에 한국도 포함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전환전략은 한국의 경우 제한성을 갖는다. 전환전략을 잠재적 지지층에 대한 지지유도 전략이라고 볼 경우 전환전략은 비당파성을 갖는 유권자들과의 접촉을 중요시 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부동층을 유인하려는 전환전략은 체계성과 의도성의 측면에서 더욱 취약성을 보이는 것 같다. 한국의 경우 정치참여 활동이 정당접촉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반면, 사회경제적 지위, 투표참여 여부 등은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정당이 쉽게 눈에 띄고 접촉할 수 있는 정치활동이 활발한 층을 중심으로 유권자를 접촉하지만, 이들 외 유권자는 거의 무차별적으로 접촉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경향은 접촉방식과 무관하게 접촉여부를 분석한 결과와 직접대면 접촉 여부만을 분석한 결과의 차이에 비추어 볼 때 직접대면보다는 여타의 간접접촉에서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새누리당의 경우 진보층보다 중도·보수층을 접촉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민주당의 경우 오히려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진보층을 접촉할 확률이 낮아, 무차별적인 유권자

접촉은 새누리당보다 민주당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새누리당의 경우 정당지지가 안정적이지만, 민주당의 경우 정당지지가 매우 유동적이라는 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개별 정당 차원에서도 정당의 제도화 정도가 누구를 접촉하느냐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진보적 유권자들이 중보·보수층에 비해 정당과 접촉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19대 총선과정에서 민주당이 자신의 지지층보다는 중보·보수층을 동원하려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진보층이 상대적으로 정당정치와 같은 제도권 정치에 대한 불만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셋째,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투표참여에 영향을 주는 다른 여러 요인들을 통제한 가운데도 정당의 정치적 동원, 즉 선거과정에서의 유권자 접촉은 투표참여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접촉여부뿐만 아니라 접촉방식의 다양성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한국 정당이 정치활동이 활발한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접촉하고, 정치적 접촉 가능성이 높을수록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높다는 것은 결국 정치에 무관심한 정치적 비활동층이 선거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한국의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접촉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것이 서구를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 일부에서 지적한 사회경제적 약자의 정치적 소외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처럼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선거과정에서의 정치적 불평등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다른 한편으로 사회경제적 갈등이 정치적으로 대표되고 있지 못한, 즉 정당체제의 사회적 대표성이 취약하다는 한국정치에 대한 기존의 진단을 확인시켜주는 한편, 제도정치에 흡수되지 못한 그리고 제도정치에 불신을 갖는 유권자를 정당이 동원하려는 노력이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 본 연구의 이러한 분석결과와 시사점은 19대 총선이라는 특정 사례에 기초하고 있으며, 일부의 경우 심층 분석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추후 연구를 통해 상당 부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투고일 2012년 8월 30일

심사일 2012년 9월 6일

게재확정일 2012년 9월 21일

참고문헌

- 강원택. 2008. “투표참여, 민주주의와 정당정치: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의 기권자 분석.” 『현대정치연구』 1권 2호.
- 김옥. 1998. “투표참여와 기권: 누가 왜 투표하는가?” 이남영 편. 『한국의 선거 II』, 서울: 푸른길.
- _____. 1999. “거주지 규모와 연령이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 조중빈 편. 『한국의 선거 III』, 서울: 푸른길.
- _____. 2002. “한국 유권자의 투표참여에 대한 통합적 연구 방향의 모색: 일반이론의 효용성에 대한 방법론적 논의를 중심으로.” 진영재 편. 『한국의 선거 IV』, 서울: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 김재한. 2011. “투표율의 연령효과 및 도농효과.” 『대한정치학회보』 18권 3호, 183-208.
- 김진하. 2008. “17대 대선 투표 참여율과 기권.” 『현대정치연구』 1권 1호, 5-31.
- 박찬욱. 1992. “유권자의 선거관심도, 후보인지능력과 투표 참여 의사.” 『한국정치학회보』 26집 1호, 153-174.
- 이갑윤. 2008. “한국선거에서의 연령과 투표참여.” 『의정연구』 14권 2호, 267-294.
- 이남영. 1993. “투표참여와 기권.” 이남영 편. 『한국의 선거 I』, 서울: 나남.
- 조성대. 2006. “투표참여와 기권의 정치학.” 『한국정치학회보』 40집 2호, 51-74.
- 지병근. 2012. “제19대 총선에서의 투표참여 결정요인: 연령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19대 총선평가 특별학술회의 발표문.
-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2004.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의식 조사(2004.04.15).” 시리즈자료 1487번. <http://www.ksdcdb.kr/series.do>(검색일: 2012.08.01).
- _____. 2008.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의식 조사(2008.04.09).” 시리즈자료 1868번. <http://www.ksdcdb.kr/series.do>(검색일: 2012.08.01).
- _____. 2012.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의식 조사(2012.04.11).”(공개 예정).
- 황아란. 1997. “선거구 특성이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 제 15대 국회의원 선거분석.” 『한국정치학회보』 30집 4호, 285-298.
- Aldrich, John. H., P. Abramson and D. Rohde. 2002. *Change and Continuity in the 2000 Elections*. Washington: CQ Press.
- Blais, André. 2000. *To vote or not to vote? The merits and limits of rational choice theory*.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 _____. 2007. “Turnout in Elections.” In Russell J. Dalton and Hans-Dieter Klingemann,

- eds. *The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Behavior*, 621-635. Oxford ·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ox, Gary. 1999. "Electoral Rules and the Calculus of Mobilization."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24. No.3, 387-419.
- Denver, David and G. H. T. Hands. 1974. "Marginality and turnout in British general election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 No.1, 17-35
- Downs, Anthony. 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Harper & Row.
- Fiorina, Morris. 1990. "Information and Rationality in Elections." In John Ferejohn and James Kuklinski, eds. *Information and Democratic Processes*, 329-342.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Gerber, Alan S. and D. P. Green. 2000. "The Effects of Canvassing, Telephone Calls, and Direct Mail on Voter Turnout: A Field Experimen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4. No.3, 653-63.
- Goldstein, Kenneth M. and T. N. Ridout. 2002. "The Politics of Participation: Mobilization and Turnout over Time." *Political Behavior* 24. No.1, 3-29.
- Goodin, Robert and J. Dryzek. 1980. "Rational Participation: The Politics of Relative Power."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0. No.3, 273-292.
- Gosnell, Harold. 1927. *Getting Out the Vote: An Experiment in the Stimulation of Vot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uckfeldt, Robert and J. Sprague. 1992. "Political Parties and Electoral Mobilization: Political Structure, Social Structure, and the Party Canvas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6. No.1, 70-86.
- Hillygus, D. Sunshine and T. Shields. 2009. *The Persuadable Voter: Wedge Issues in Presidential Campaig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arp, Jeffrey. 2003. "Incentive to Mobilise? The Effects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on Party Activity in New Zealand." Annual Conference of the Pacific Northwest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October.
- Karp, Jeffrey and S. A. Banducci. 2007. "Party Mobilization and Political Participation in New and Old Democracies." *Party Politics* 13. No.2, 217-234.
- Katz, Daniel, and S. Eldersveld. 1961. "The impact of local party activity upon the electorate." *Public Opinion Quarterly* 25. No.1, 1-24.
- Katz, Elihu and P. F. Lazarsfeld. 1955. *Personal Influence: The Part Played by People in the Flow of Mass Communications*. Glencoe, IL: Free Press.

- Kernell, Samuel, and G. Jacobson. 2000. *Logic of American Politics*. Washington, DC: Congressional Quarterly Press.
- Kramer, Gerald. 1970. "The effects of precinct level canvassing on voting behavior." *Public Opinion Quarterly* 34. No.4, 560-572.
- Lazarsfeld, Paul, Bernard Berelson, and H. Gaudet. 1948. *The People's Choice: How the Voter Makes Up His Mind in a Presidential Election*. New York: Duell, Sloan, and Pearce.
- Mainwaring, Scott. 1998. "Party Systems in the Third Wave." *Journal of Democracy* 9. No.3, 67-81.
- Meltzer, A. H. and S. F. Richard. 1981. "A Rational Theory of the Size of Governmen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9. No.5, 914-927.
- Merriam, Charles, and H. Gosnell. 1924. *Non-Voting: Causes and Methods of Control*.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Norris, Pippa. 2002. *Democratic Phoenix: Reinventing Political Activism*.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owell, G. Bingham. 1980. "Voting Turnout in Thirty Democracies: Partisan, Legal, and Socio-Economic Influences." In R. Ros, ed. *Electoral Participation: A Comparative Analysis*, 5-34. Beverly Hills, CA: Sage.
- Reed, Daniel. 2007. "Why the Methods Matter: The Effectiveness of Party Contacting Since the 1950s." Midwest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Chicago, IL. U.S.A. April.
- Rosenstone, Steven J. and J. M. Hansen. 1993. *Mobilization, Participation, and Democracy in America*. London: Macmillan.
- Ryu, Jaesung. 2011. "Party Contacting and Voter Turnout in the American Elections, 1960-2008." *Journal of American Studies* 43. No.1, 185-211.
- Vowles, Jack. 2002. "Offsetting the PR Effect? Party Mobilization and Turnout Decline in New Zealand, 1996-1999." *Party Politics* 8. No.5, 587-605.
- Wielhouwer, Peter W. 2005. "Political Parties and Participation Inequality in 2004." 2005 State of the Parties conference. Akron, OH. U.S.A. October.
- Wolfinger, Raymond E., and Rosenstone, Steven J. 1980. *Who Votes?*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부록 1〉 19대 총선 투표참여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B	S.E.	Wald	Sig.	Exp(B)
연령	0.019**	0.010	4.005	0.045	1.019
학력	0.030	0.208	0.022	0.883	1.031
소득5분위	0.112	0.082	1.886	0.170	1.119
거주지규모	0.014	0.089	0.025	0.874	1.014
사회조직	0.865**	0.389	4.932	0.026	2.375
선거관심	-0.801***	0.142	31.983	0.000	0.449
효능감	0.154***	0.044	12.550	0.000	1.167
투표의무감	-1.132***	0.223	25.638	0.000	0.322
정당일체감	-0.405*	0.212	3.653	0.056	0.667
충청	-0.451	0.343	1.723	0.189	0.637
호남	-0.102	0.334	0.093	0.760	0.903
대경	0.302	0.382	0.623	0.430	1.352
부울경	-0.014	0.283	0.002	0.961	0.986
정당접촉방식다양성	0.207**	0.085	5.904	0.015	1.230
Constant	1.335	1.159	1.328	0.249	3.800

-2 Log likelihood=616.9381, Cox & Snell R=0.320266, Nagelkerke R²=0.430831

1) *** p<.01, ** p<.05, * p<.10 p<.01, N=656

2) 실제 투표율로 가중치를 두고 분석한 결과임

출처: 한국선거학회 19대 국회의원선거조사(한국사회과학데이터 2012)

ABSTRACT

Party Mobilization and Voter Turnout in the 19th General Election

Youngtae Kim | Mokpo National University

This research examines what types of voters are contacted by parties and the impact of the party contact on voter turnout in the 19th Korean National Election. The empirical results show several important findings. First, the mobilization efforts of the parties have been on the rise in Korea. Second, the socio-economic variables and the party royalties hypothesized to influence party contacting are not significant, while the more active in the political participation, the more likely citizens are to report having been contacted. Third, the Korean parties are likely targeting a broader segment of the electorate. This means that the Korean parties do not concentrate their efforts on those predisposed to vote. Forth, the impact that the mobilization efforts have on an individual's likelihood of voting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even when controlling another variables that affect voter turnout. This confirms that parties serve an important role in Korean electoral politics.

Keywords: party mobilization, party contact, voter turnout, Korean general Election